

요

—

약

—

—

10년 전, 178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한 가지 원칙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보상과 배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 지구정상회담의 리우선언에 명시된 이 세 가지 “접근원칙(access principles)”은 공평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의사결정의 전 지구적 근본 규범을 대표하고 있다. (원칙 10의 전문은 1장 머리말 맨 앞을 볼 것)

환경정보 접근은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에 바탕 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정부의 환경 행위를 개선하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식수가 안전한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염에 대해 시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정부 오염규제 정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충분한 정보에 바탕 한 의미 있는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식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결정에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식을 통합시킨 결정은 그렇지 않은 결정보다 대개 더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결과를 낳는다.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접근 혹은, 정의 접근은 개인과 공익단체의 정보와 참여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UN과 지역 포럼의 정치적 선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로 투명성, 포괄성, 책임성과 같은 거버넌스 원칙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책결

정에 있어 시민참여가 정책 수용성뿐 아니라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빈곤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 수준에서 리우 원칙 10의 실행 정도를 평가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적용한 초기 연구 결과이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9개국(칠레,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태국, 우간다, 미국) 연구팀들이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각국 정부의 리우선언 실행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 정보, 참여, 정의의 시민 접근을 확대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국제 연합체인 TAI의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TAI’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장 머리말 〈박스 1.1〉을 참조.)

9개국 연구사업의 공통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있어 시민참여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밝히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접근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 통합시키고 실행하고 있는가? 9개국 연구보고서는 국가 수준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실천의 근거를 제공한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 경제, 문화, 정치 전통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 보고서는 전 지구적 실행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평가 자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방법론을 실험해보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 맥락에서 정부의 실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공통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공동의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만큼 각국의 시민참여 시스템은 충분히 유사한가?

연구방법

이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독특하다. 접근원칙을 반영한 법률과 그 실천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 참여,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원 자료를 생산하였고, 환경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독립적인 평가를 결합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여러 나라들을 비교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개별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가진다는 점이다.

방법론적 틀은 9개국 시민참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반적인 조건과 세 가지 접근원칙 각각의 주요 요소의 실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의제21, 시민참여를 위한 미주회의(Inter-American Strategy on Public Participation), 의사결정과 환경문제에 있어 정보, 참여, 정의 접근에 관한 협약(오프 후스 협약: Aarhus Convention) 등 국제적, 지역적인 협약의 내용에 기반 하여 주요

요소를 추출하였다. <박스 1.4>에서는 이것들과 그 외 국제협약들을 참조하여 시민참여의 국가적 시스템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9개국 연구 결과 방법적 틀과 적용의 약점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국에 걸쳐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성과 세 원칙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과 강한 영역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평가는 이번 연구 결과를 9개국 이외의 다른 지역과 나라들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들과 비교 검토해 볼 때 더욱 타당할 것이다.

연구결과

◎ 다양한 국가의 시민참여 시스템을 단일한 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다. 법적 전통과 문화적 정치적 조건, 소득 수준, 개발경로, 경제적 독립, 자연자원이 상이한 9개국 연구팀들은 이 연구를 위해 개발한 방법론적 틀을 적용해 정부의 접근원칙 실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각국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교적 적은 부분만 고칠 필요가 있었다. 칠레,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간다 정부는 평가결과가 성과와 문제점을 구명하고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환영하였다.

이는 방법론적 틀이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 적용하기에 충분하고 국가별 성과를 평가하는 보편적 평가틀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개별 국가들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틀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리우 원칙10의 전 세계적인 실행 정도는 어떠한가?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대부분 나라들이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마련하였다. 모든 나라들이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향한 주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에서 '강함' 점수를 받은 나라는 없었다. 연구대상국 모두 법률과 실천 간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9개국에 세계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지역을 비교하여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세 가지 접근원칙의 실행 정도가 고르지 못하다. 연구대상국 대부분이 정보 접

근권 보장에 있어 법률과 실행 모두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측면의 평가는 이보다 낮았으며, 정의 접근이 가장 낮았다. 세 원칙의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각 접근원칙들은 전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한 원칙의 실행이라도 약하면 시민참여의 전체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

접근원칙을 반영한 법적 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실제 멕시코는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정보 자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률을 많은 나라에서 꾸준히 입법화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정보에 관한 시민 접근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정보 접근이 제한된 것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역전될 수도 있다.

법률의 개선 속도를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대상국 대부분에서 접근원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간다와 태국만이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참여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의 환경영향평가법도 공지와 시민의견청취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또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와 헝가리에서는 관료들의 뿌리 깊은 '비밀주의'가 정보공개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세 가지 원칙 각각의 강점과 약점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평가결과 9개국이 영역별 성과에 있어 상당한 다양성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맥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유사성을 보이기도 했다. (세 영역별로 국가별 성과를 평가하는 점수가드는 <그림 7.1>을 참조하라.)

정보 접근

정보 접근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명확한 비상사태 상황에서 강하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화산폭발 이후, 헝가리는 하천이 청산가리로 오염된 이후, 남아프리카와 우간다는 콜레라 발생 이후,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의 질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한 가지 예외는 2002년 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홍수에 관한 시기적절하고 알맞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대상국들은 환경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연구대상국 정부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지도나 도표 등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동향에 관한 비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보고서를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작성해왔다. 이런 보고서는 대부분 널리 배포되며 저가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1997년에 연방 수준의 환경보고서 작성을 중단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번(1998년)만 의제21의 보고 요건에 맞추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대기질과 수질에 관한 정보 접근은 다양각색이다. 태국의 방콕, 칠레의 산티아고를 비롯한 몇 개국에서는 통합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대기질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상세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질의 경우 연구대상국들은 통합된 정보를 갖추지 못해 정보 접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헝가리의 경우, 12명의 환경 감시관에게 제출되는 지표수 수질 정보와 19개 공공보전 기구에 제출되는 식수 수질에 관한 정보는 절차, 비용, 응답률이 편이하게 달랐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RandWater는 자신들이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의 지도를 작성하여 수질이 안전하지 못한 지역을 표시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수질 정보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민간 산업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은 특히 약하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종종 비밀로 부쳐진다. 칠레와 인도의 경우, 시민들에게 산업시설 화재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헝가리의 경우는 예외다. 지자체들이 시민들에게 가스 유전폭발과 화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즉각적인 위험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연구대상국 대부분에서 시민들은 기업 특히 민간 시설들이 배출기준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시설 별 배출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미국에서만 종합적이고 충분히 작동하는 시설 수준의 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송목록제도(이른바, 유해물질 배출 목록)를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헝가리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참여 접근

참여는 “환경” 부문에서 가장 강하고, “현실”(real) 부문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가별 사례에서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우간다의 국가 산림 정책 개발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 관리 영역 지도 작성의 경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과 폭넓게 의사소통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해양 관광’ 계획 과정과 태국의 민간 발전소 정책은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폐쇄적이었다. 중유럽과 동유럽의 국가 에너지 정책 개발의 다섯 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해그룹

들의 강력한 참여요구가 있었던 슬로바키아만이 유일하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국가와 지방 계획의 참여는 다양각색이다. 몇몇 국가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헝가리의 광역 개발계획 수립 책임 주체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가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잘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계획의 주요 변수들이 이미 결정된 후인 계획과정의 후반부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의미 있는 시민참여는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멕시코 연방구의 생태보전지구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전 효과를 향상시키고 계획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귀중한 제안들을 얻을 수 있었다.

산업과 허가 및 개발이권 관련 의사결정 참여는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경우, 평가된 사례에서 행정당국은 공장 운영권을 주거나 산림 개발권을 주거나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주변 지역사회나 관련 이해집단에 알리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발전소와 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 초기에 주변 지역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장기간 갈등을 초래하였다.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영향 받는 지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협의’ 규정은 필요한 정보를 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 적용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사업 방향을 잡는 초기 단계에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허가나 개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후 주민들이 참여하여 감시나 모니터링을 하는 사례도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한 가지 예외 사례로 허가를 갱신하는 데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미국 오하이오주 발전소 허가 과정이 있다.

정의 접근

불명확한 법으로 인해 정의 접근이 제약받고 있다. 9개 연구대상국 대부분에서 정보와 참여 접근을 지배하는 법과 규제 틀은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정도로 포괄적이거나 상세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만이 공개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밝히고 공개되는 정보 유형, 공개 주기, 정보 공개 청구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틀을 만들었다.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많은 연구대상국에서 어떤 정보가 공공 영역에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공무원들에게 공개할 정보와 공개하지 않을 정보를 결정하는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 법적 기준에 대한 제한된 해석과 ‘공중’(公衆)과 ‘공익’에 대한 법적 정의의 미비로 시민들이 정보와 참여 접근을 요구하기 위해 정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당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 환경적인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의 접근은 제한된 보상 메커니즘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 정의 접근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행정 법원이나 대안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활용 가능한 보상 메커니즘이 다양할수록 활성화할 수 있다. 연구대상국 중에서는 새로운 보상 메커니즘을 실험하고 있는 곳도 있다. 태국은 행정법원을, 인도는 특별 환경재판소를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이런 법적 기구들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검토한 시민참여 의사결정 과정 중 시민들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적 혹은 법적 절차가 마련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높은 비용은 정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시민들이 행정적,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나라별로 다양하다. 개인이나 공익단체들에게 이 비용을 면제해주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법률 대리 비용이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경우, 연구팀의 추정에 따르면 법률 대리 비용이 연평균소득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헝가리와 인도, 우간다의 경우 이런 무료 법률 서비스는 도시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행정 비용과 소송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정부가 후원하는 법률지원위원회가 일반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비용을 보조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자원 센터와 많은 대학의 법률 상담소들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 성과 향상을 촉진시키는 요소와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9개국 평가 결과 접근원칙 실행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정부의 역량 부족이 시민참여를 저해한다. 정보, 참여, 정의 접근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담당자, 시설, 절차, 교육 등에 있어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태국 공무원들은 정부 부서에 흩어져있는 파일 자료들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시설 수준의 정보를 직접 보고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자체 공무원들은 시민참여를 적극 독려할수록 자원이 제한된 시정부의 얼마 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접근원칙에 관련된 많은 법률과 절차들은 상대적으로 최신의 것들이다.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그 중요성과 실행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법과 실천간 간극을 줄이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9개 연구대상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

국만이 유일하게 환경정보와 환경정책을 다루는 모든 수준의 기관 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개방되고 있었다.

시민사회의 역량 부족도 성과를 제약한다.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정보를 얻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모른다면 접근을 제공하는 메커니즘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대부분 연구 대상국 정부들은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환경 교육 교사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언론의 관심과 시민들의 감시가 정부 성과를 개선시킨다. 9개국 평가 결과 접근 요구의 증대가 접근 기회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경우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정부 성과가 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 다루는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의 경우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의 경우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문제에 관한 각국 언론기사를 평가한 결과, 9개국 중 3개국만이 기사 수준(level)에서 '강함'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사의 질(quality)에 있어서는 4개국이 '강함'으로 평가되었다. 유일하게 태국이 정기적인 환경기사와 다양한 관점의 기사, 사안에 관한 분석 등을 감안해 두 항목 모두에서 '강함'으로 평가되었다. 시민감시를 용인하거나 이에 반응하는 국가 역시 참여 접근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 공익단체들의 관심의 초점인 두 가지 민감한 환경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참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다른 두 사업의 경우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헝가리의 경우, 지역 공익단체들이 산업재개발계획(industrial redevelopment) 관련 건설 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제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는 접근원칙을 국제협약에 포함시키고 원조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각국의 접근원칙 실행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대상국들 중 몇몇 나라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목록제도(PRTR)의 도입, 환경질 보고서 출판,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접근원칙 실행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 원조기구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조기구들은 자신의 운영을 통해 지원국의 투명성과 시민참여의 규범을 저해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우간다의 경우 상당한 재정 원조를 받는 사업일수록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 태국의 경우는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하수처리사업이 시민참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국제협약은 접근원칙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강력한 자력대로, 대부분 연구대상국에서 정부 활동을 촉진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해왔다. 헝가리의 경우, 유럽연합 가입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PRTR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오르후스 협약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참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만들었다.

제언

이상에서 요약한 연구 결과와 결론은 국가와 국제 정책 영역에서 각국 정부와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시민참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정책 제언들을 모두 종합하면, 리우 원칙10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제가 된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모두 시민참여 실태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먼저 독립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 9개국 평가 결과에 대한 최초의 반응은 그러한 평가 자체가 시민참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와 실천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임을 말해준다.

국제사회는 국가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평가를 개발과 적용을 지원해야 한다.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의 방법론적 틀과 가이드라인, 각국의 모범 사례 공유 메커니즘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세 가지 원칙 모두에 있어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 시민참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균형 잡힌 투자를 해야 한다.

접근의 법적 틀을 마련한 나라는 법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시스템 활용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시민참여 시스템을 실행하는 정부 역량에 대한 투자가 각국 정부와 원조기구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접근 요구를 추동하는 두 개 엔진인 공익단체와 언론이 그들의 역할을 강력하고 책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복돋워야 한다. 각국 정부는 까다로운 NGO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언론은 환경기사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재정 원조와 접근원칙을 국제 제도와 협약에 통합시켜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원조기구는 접근 시스템 개발 우선 지원을 통해, 그리고 스스로 조직 운영에 있어 정보, 참여, 정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내규와 실행을 개선함으로써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다.

명백히, 이상에서 제언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제 정책 영역 모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실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동 목표를 위해 이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각 제도적 행위자들에 대한 우리의 제언은 〈박스 7.2〉를 참조하라.)



1 서론

1. 목적
2. 좋은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
3. 지구적, 지역적 규범
4. 보고서 구성